

CFE REPORT
:: CFE Report ::

2025. 8. 26.

대기업 일자리 확대의 제약 요인과 정책적 개선방안

한 규 민
(자유기업원 연구원)

고 광 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요 약〉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 대기업의 신규 고용 창출 여력은 지속적으로 약화되었으며, 자동화 및 해외 생산기지 이전 등 구조 변화에 따라 1차 노동시장 일자리는 장기간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와 달리 중소·영세사업체 중심의 고용이 확대되며 노동시장의 질적 불균형이 심화됐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임금 격차가 고착화되면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이 제한되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 부족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고생산성 부문 고용 비중 확대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자원 배분 왜곡 요인을 해소하는 방향의 제도 개편이 요구된다.

현행 대기업 일자리 구조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첫째, 한계기업의 과도한 시장 잔존이다. 장기간 재무구조가 부실한 기업들이 정책·금융 지원에 기대어 연명하면서 산업 전체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정상기업의 고용·투자 여력을 위축시키고 있다.

둘째, 중소기업 비중 확대에 따른 산업 구조 불균형이다. 중소기업 고용 비중이 80%를 상회하는 고용구조는 규모의 경제 실현을 제약하고, 기술혁신 역량을 가진 대기업의 성장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

셋째,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퇴출 지연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정책자금 융자, 신용보증 및 세제감면 등 각종 지원제도가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의 시장 잔존을 장기화시키며,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의 자원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넷째, 혁신적 대기업 성장 기반의 약화이다. 부실기업이 차지하는 자원 몫이 증가하면서 대기업의 신사업 진출 및 대규모 투자가 제약되고, 국내 산업 전반의 혁신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 특히 숙련 인력과 자본이 저생산성 부문에 묶여 대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 진출 기회를 제한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를 기반으로 대기업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방향으로 1) 한계기업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 도입 및 조기경보체계 구축, 2)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단계적 개편과 핵심성과지표(KPI) 기반 선별지원 체계 도입, 3) 노동 유연성 제고 및 인력 이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등을 제시한다.

〈목 차〉

- I. 확대되지 않는 1차 노동시장 일자리
- II. 기업규모별 노동시장 현황 분석
 - 1. 대기업 일자리 공급 규모
 - 2. 대기업 고용 정체와 경제적 영향
- III. 대기업 일자리 정체의 구조적 문제점 분석
 - 1. 한계기업의 과도한 시장 잔존
 - 2. 중소기업 비중 확대에 따른 산업 구조 불균형
 - 3. 정부의 중소기업 중복적 지원정책 진단: 한계 중소기업 퇴출 지연 원인
 - 4. 혁신적 대기업 성장 기반의 약화
- IV. 대기업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
 - 1. 한계기업 신속 퇴출의 필요
 - 2.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구조 재편
 - 3. 노동 유연성 확보와 인재 이동 활성화 방안 마련
 - 4. 한계기업 퇴출 및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

참고 문헌

I

확대되지 않는 1차 노동시장 일자리

● 정체된 1차 노동시장 일자리

- ▶ 1차 노동시장(대기업·주요 제조업 등 고생산성 부문)의 고용 규모가 지난 수십 년간 유의미한 확장을 보이지 않음
- ▶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 사업체의 신규 고용 창출 여력이 급격히 축소되고, 이후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정체가 지속됨
- ▶ 대기업 신규 채용은 제한적인 반면, 중소·영세사업체 중심의 고용 확대가 이루어져 노동시장의 질적 불균형은 심화됨
- ▶ 자동화·디지털 전환, 해외 생산기지 이전 등 구조 변화로 인해 국내 대기업의 고용 창출 능력이 과거 대비 약화됨

● 1차·2차 노동시장 간 구조적 격차

-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임금·고용 안정성 격차가 장기간 고착화됨
- ▶ 300인 이상 사업체 평균 임금은 5~9인 규모 사업체 대비 약 두 배 수준, 기술투자·R&D·인력 유지 능력 등에서도 큰 차이 존재
- ▶ 고생산성 부문의 일자리 수가 적어 인력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고, 경제 전반의 생산 능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음
- ▶ 숙련 인력과 자본이 대기업 중심으로 쏠리는 반면, 대기업 규모 확대의 제약으로 고부가가치 산업 전반의 성장 속도가 제한됨

● 대기업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 모색의 필요성

- ▶ 고생산성 부문 고용 비중 확대는 국가 전체의 노동생산성 향상과 산업 경쟁력 제고의 핵심 조건임
- ▶ 대기업의 규모화(scale-up)를 가로막는 제도·규제 요인(과도한 규제, 노동시장 경직성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임
- ▶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산업 구조 고도화를 위해 대기업 고용 기반을 확충하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 ▶ 노동시장의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성장 전략이 필요함

II

기업규모별 노동시장 현황 분석

1. 대기업 일자리 공급 규모

● 사업체 규모별 고용 비중 현황

- ▶ 우리나라 300인 이상 규모 사업체의 종사자 비율 관련한, 기존 연구 및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본 결과, 한경련(2021) 13.9%, 한국개발연구원(2024) 14.0%, 한국노동연구원(2023) 22.1%, 통계청(2024) 23.5%로 나타났음. 한경련과 한국개발연구원 약 14%, 한국노동연구원과 통계청은 약 22~23% 수준으로 7%p 정도 차이가 나며, 대체로 22% 미만 수준으로 보임

[표1] 조사 기관별 300인 이상 규모 사업체 종사자 비율

조사 기관	종사자 비율(%)	기준연도(년)
한국경제인연합회	13.9	2018
한국개발연구원	14.0	2021
한국노동연구원	22.1	2002-2021 ¹⁾
통계청	23.5	2023

출처: 한국경제인연합회(2021), 한국개발연구원(2024), 한국노동연구원(2023), 통계청(2024)

- ▶ 매출액 기준에 따른 대기업 종사자 비율과 관련한 기존 연구 및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통계청(2024) 21.0%, 중소벤처기업부 19.0%로 약 20% 수준으로 나타남.

[표2] 매출액 기준에 따른 대기업 종사자 비율

조사 기관	종사자 비율(%)	기준연도	대기업 구분 기준
통계청	21.0	2023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²⁾ 상 매출액
중소벤처기업부	19.0	2022	기준연도 포함 3년 평균매출액 등

출처: 중소벤처기업부(2024), 통계청(2024)

1) 한국노동연구원의 수치는 전체 분석기간(2002-2021년) 표본을 활용하여 산출한 수치임.
2) 2017년 10월 17일 개정.

- ▶ 통계청의 시계열 통계를 살펴보면 이와 좀 상이한 데, 우선 매출액 기준 대기업 종사자 비율은 20% 전후에서 지난 8년 간 아주 조금씩 증가해 2023년 21%를 보여 기존 타 조사결과와 유사한 수치를 보임, 반면, 종사자수 기준 300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 비율은 32% 수준으로 지난 8년 간 크게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기존 연구와 비교할 때 약 10%p 높게 나타났음

[그림1] 연도별 대규모 사업체 고용비중 추이(매출액/종사자수 기준)



출처: 통계청(2024), 「일자리행정통계」 참고 수정보완.

- ▶ 대기업 및 300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 비율에 대한 기존 다양한 조사결과 및 통계청의 시계열 자료를 토대로, 보면, 대체로 국내 대기업 종사자의 비율은 전체 노동시장에서 약 20% 수준으로 볼 수 있을 것임. 300인 이상 중견기업과 대기업을 포괄한 기업체의 종사자 수 비중은 22~32% 수준 정도로 짐작할 수 있음
- 대기업 일자리 부족의 구조적 현실
 - ▶ 대기업 일자리는 양질의 고용, 안정적 소득, 사회보험·복지제도 보장 등에서 우위를 가지지만, 절대적인 수가 매우 한정적임
 - ▶ 청년층, 여성, 고학력 인력 모두에서 대기업 취업 선호도가 높으나, 실제 공급은 전체 고용의 5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남

2. 대기업 고용 정체와 경제적 영향

● 대규모 사업체 고용 비중과 생산성의 상관관계

- ▶ 대규모 사업체의 고용 비중은 국가 전체의 노동생산성과 직결됨
- ▶ 시·도 단위 회귀분석 결과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노동생산성이 높은 경향이 나타남(고영선, 2024)
- ▶ 반대로,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 고용 비중이 높을수록 노동생산성은 하락하는 경향이 확인됨(고영선, 2024)
- ▶ 이는 규모의 경제와 조직 효율성이 대기업 고용 구조에서 발휘되는 특성을 반영함
- ▶ 300인 이상 대기업 고용 비중이 1%p 높아질 때 해당 지역의 1인당 연간 노동생산성은 41만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단순한 임금 수준 차이를 넘어, 기술 투자·인재 육성·조직 관리 역량이 생산성에 미치는 구조적 효과를 보여줌(고영선, 2024)

● 대기업 고용 정체와 지역 불균형

- ▶ 대기업 고용 정체는 지역 불균형 심화에도 밀접하게 연결됨
- ▶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대규모 사업체의 집적도가 높아 양질의 일자리 비중이 큼
- ▶ 반면 비수도권은 영세·중소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가 고착화되어, 생산성·임금·고용 안정성에서 수도권과 격차를 보임
- ▶ 이로 인해 비수도권의 청년층과 생산가능인구는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는 지역 인구 유출을 가속화됨
- ▶ 장기적으로는 비수도권의 산업 기반과 인구 구조가 모두 약화되며, 지방 소멸 위험을 높이는 악순환이 발생함
- ▶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고용 문제를 넘어, 국가 전체의 경제 효율성과 사회 안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침

● 고용 구조의 양극화 심화

- ▶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청년층의 뚜렷한 대기업 선호와, 실제 대기업 고용 비중 간 괴리가 구조적으로 고착된 상태임(고영선, 2024)
- ▶ 2023년 실시한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의 64%가 대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반면, 중소기업을 희망하는 비율은 16%에 불과함
- ▶ 임금근로자 기준 300인 이상 사업체의 고용 비중은 18%에 불과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함(고영선, 2024)

- ▶ 이러한 괴리는 단순한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노동시장 전반의 구조적 양극화를 심화시킴
-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복리후생·고용 안정성 격차가 크기 때문에, 대기업 일자리 부족은 경쟁 강도를 높이고 진입 장벽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짐
- ▶ 그 과정에서 학벌·경력·연고 등 비가격적 요인이 고용 기회를 좌우하는 경향이 강해지며, 노동시장의 효율적 인력 배분이 저해됨

III

대기업 일자리 정체의 구조적 문제점 분석

1. 한계기업의 과도한 시장 잔존

● 한계기업 개념과 현황

- ▶ 한계기업은 장기간 재무구조가 부실하여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게 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이는 자원 배분 비효율과 산업 경쟁력 저하를 초래함
- ▶ 2016년 전체 상장사 중 한계기업 비중은 9.3%였으나, 2022년에는 17.5%로 8.2%p 증가함
- ▶ 특히 코스닥의 한계기업 비율은 20.5%로 코스피(11.5%) 대비 두 배 수준 (전국경제인연합회, 2023)
- ▶ 코로나19, 급격한 금리 인상, 경기 둔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취약 기업군의 구조조정이 지연됨
- ▶ 2022년 기준 한계기업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은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임대 서비스업(30.4%), 운수·창고업(25.8%),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25.0%), 도매 및 소매업(23.2%), 정보통신업(16.8%), 제조업(16.4%), 건설업(15.5%), 금융 및 보험업(3.5%) 순임 (전국경제인연합회, 2023)

● 고용·투자 파급효과

- ▶ 한계기업 자산 비중이 10%p 높아질 경우 정상기업의 고용 증가율 및 투자율은 평균적으로 각각 0.53%p 및 0.18%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됨(김선영, 2015)
- ▶ 반대로 한계기업 자산 비중이 10%p 감소하면 정상기업에서 약 11만 명의 고용 창출이 가능해짐(김선영, 2015)
- ▶ 한계기업의 잔존은 신규 투자 여력을 잠식하고 정상기업의 성장 기회를 제한하며 노동시장의 효율적 인력 재배분을 저해함

● 구조조정 체계의 한계

- ▶ 현재 구조조정은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사후적·소극적 방식이 주를 이루며, 담보 위주 여신 관행과 정부·금융권의 관성적 지원이 문제로 지적됨(박찬우, 2022)
- ▶ 민간 사모펀드(PEF)나 인수합병(M&A) 기반 구조조정이 미흡하여 선제적 기업 정리가 어려움
- ▶ 민간이 선제적으로 기업을 정리하거나 재활성화하는 역할이 거의 없는 상황임

2. 중소기업 비중 확대에 따른 산업 구조 불균형

● 중소기업 고용 비중의 지속적 확대

- ▶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조사에 따르면 한국 전체 고용의 약 81%가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대기업의 고용 비중은 19% 내외에 불과함
- ▶ 대기업 일자리의 정체 속에서 산업 구조가 중소기업 중심으로 재편되며, 고생산성·고임금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축소됨

● 생산성·임금 격차의 구조적 고착

- ▶ 2022년 기준 300인 이상 사업체 평균 임금은 5~9인 규모 사업체 대비 약 2배 수준임(고영선, 2024)
- ▶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R&D 투자·기술혁신 역량·인력 유지 능력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임
- ▶ 고부가가치 산업의 성장을 주도할 대기업 부문이 위축되면서, 경제 전체의 노동생산성 상승 여력이 제한됨

● 산업 경쟁력 저하와 시장 왜곡

- ▶ 중소기업 과잉 비중은 규모의 경제 실현을 저해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본·인력이 분산되는 결과를 초래함
- ▶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오히려 생산성 격차를 고착시키고, 우량 인력의 대기업 유입을 제한하여 효율적 자원 배분을 저해함

3. 정부의 중소기업 중복적 지원정책 진단: 한계 중소기업 퇴출 지연 원인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

- ▶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자금 융자사업은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저리·장기 조건으로 제공해 자금난을 해소하려는 제도임
- ▶ 그러나 대출 심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매출과 이익이 장기간 감소하는 기업에도 지원이 반복되고 있음
- ▶ 이로 인해 부채상환 능력이 없는 한계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장기간 존속하는 결과를 초래함

● 기술개발 지원사업

-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산업기술혁신사업 등은 신제품과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임

- ▶ 그러나 상용화 가능성이 낮은 과제나 실패 가능성이 큰 프로젝트에도 지원이 이어지고 있음
 - ▶ 과제 실패 후에도 제재 없이 재지원이 가능해 혁신 역량이 낮은 기업이 정부 지원 경험만으로 생존 기간을 연장하는 문제가 발생함
- 신용보증지원제도의 장기 잔존 문제
- ▶ 중소기업 신용보증지원제도는 담보능력이 부족하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의 대출을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해주는 정책금융 제도임
 - ▶ 본래 기술력·성장성이 있으나 담보가 부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취지임
 - ▶ 부채비율이 매우 높거나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상태)인 기업도 보증을 반복적으로 받는 사례가 존재함
 - ▶ 원래 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차단되어 퇴출됐을 기업이 공적 보증 덕분에 연명하는 일이 발생함
 - ▶ 이처럼 재무 건전성이 취약한 기업에 대한 보증이 확대되면, 오히려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음
- 세제지원제도
-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은 세부담 경감을 통해 경영 안정성을 높이려는 제도임
 - ▶ 그러나 재무건전성이나 사업성과에 관계없이 일괄 적용되어 적자기업도 세제 혜택을 누리며 존속할 수 있어, 생산성 향상보다는 단순 생존 유지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음
- 지역·부처별 중복사업
- ▶ 지방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등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 다양성 확대를 목표로 하는 사업임
 - ▶ 중앙과 지방이 유사한 사업을 중복 운영하면서 동일 기업이 다수의 지원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복수 재원을 통해 구조조정 압박을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짐
- 채무재조정·이자지원제도
- ▶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이자차액보전제도는 부실채무 상환 유예와 이자 부담 완화를 통해 기업 회생을 돕는 제도임(금융위원회, 2024)

- ▶ 재무지표 개선이 없는 기업에도 반복 지원이 이뤄져, 사실상 퇴출이 필요한 기업이 장기간 생존하며 금융기관 부실 위험을 전가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표2] 정부의 중복적 중소기업 지원정책 현황 및 진단

사업명	구체적 사업내용	진단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저리·장기 조건으로 제공해 자금난 해소	· 대출 심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매출·이익이 장기 간 감소하는 기업 지원 반복 · 부채상환 능력 없는 한계기업이 퇴출되지 않고 장기 간 존속 결과 초래
기술개발 지원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R&D 지원사업, 산업기술혁신사업 등 신제품·신기술 개발	· 상용화 가능성이 낮은 과제나 실패 가능성 큰 프 젝트에도 지원이 이어져 R&D 투자효율성 저조 · 과제 실패 후 제재 없이 재지원 가능, 저혁신역량 기업 정부지원 경험만으로 생존 기간 연장 문제 발생
신용보증 지원제도	담보능력이 부족 혹은 신용등급 낮은 기업 대출을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해주는 정책금융 제도	· 본래 기술력·성장성이 있으나 담보 부족 기업 대상 창업·성장 지원 취지 · 고부채비율 혹은 이자보상배율 1미만(영업이익으로 이자 못갚는 상태) 기업도 보증 반복 사례 발생 · 재무건전성 취약 기업에 대한 보증 확대 시 성장잠재 력 높은 기업이 필요 자금 확보 어려워지는 악순환 발생
세제지원제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세부담 경감 통한 경영안정성 제고	· 재무건전성 혹은 사업성과 관계없이 일괄 적용, 적 자기업도 세제혜택 누리며 존속 가능, 생산성 향상 보다 단순 생존 유지 귀결 사례 다수 발생
지역 대상 부처별 중복사업	지역특화육성사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다양성 확대 사업	· 중앙·지방 유사 사업 중복 운영, 동일 기업이 다수 지원금 수령 사례 발생, 복수 자원 통해 구조조정 압박 회피 여지 커짐
채무재조정· 이자지원제도	부실채무 상환 유예와 이자 부담 완화 통해 기업회생 지원 제도	· 재무지표 개선 없는 기업에 반복 지원, 한계 기업이 장기간 생존하며 금융기관 부실위험 전가

4. 혁신적 대기업 성장 기반의 약화

- 한계기업 존속으로 자본·인력 등 시장 자원 배분이 왜곡되는 현상 나타남
 - ▶ 한계기업·좀비기업이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 장기간 시장에 잔존하면, 한정된 자본과 인력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됨
 - ▶ 정상적인 시장 구조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진 기업이 퇴출되고, 그 자원(노동, 자본, 기술)이 더 생산성이 높은 기업으로 이동함. 그러나 부실기업의 지속적 존속은 이러한 창조적 파괴 메커니즘을 약화시키고, 시장 전체 효율성을 떨어뜨림 (Dan Andrews 외, 2017)
 - ▶ 특히, 부채비율이 높고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들이 계속 영업을 유지하면, 금융기관은 위험이 큰 대기업 혁신 프로젝트 대신 안전성이 낮더라도 정부 보증이 있는 부실기업 대출에 자원을 할당하게 됨
- 비생산적 기업이 차지한 시장 몫만큼 성장 가능성 높은 대기업 기회 축소됨
 - ▶ 고위험·고수익 신사업에 진출하려는 대기업은 대규모 자본 조달이 필수적임. 그러나 금융시장이 부실기업 지원에 묶여있으면, 혁신적 대기업의 투자 자원 조달이 어려워짐
 - ▶ 예를 들어, 신성장 산업(차세대 반도체, AI·로봇, 바이오 등) 투자를 위해서는 막대한 초기 자본과 연구개발비가 필요하지만, 금융기관이 부실기업 지원에 상당한 여신을 할당하면 대기업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축소될 수밖에 없음
 - ▶ 이는 결국 대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 기회를 상실하게 만들고, 장기 경쟁력 저하로 이어짐
- 대기업의 신규 투자·신사업 진출 여력 감소로 산업 혁신 동력이 약화됨
 - ▶ 한계기업이 차지하는 산업 비중이 높아질수록, 시장 내 경쟁 강도가 낮아지고 기술혁신 유인이 약화됨
 - ▶ 특히 제조업·서비스업에서 생산성이 낮은 중소기업이 존속하면, 해당 산업의 평균 생산성이 낮아지고, 대기업이 첨단 기술과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하는 속도도 더뎠다
 - ▶ 산업 내 한계기업 비중이 1% 증가할 때 노동생산성은 약 0.1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배한형 외, 2019)
 - ▶ OECD 연구에 따르면, 좀비기업 비중이 높아지면 가장 생산성이 높은 건전한 기업의 성장은 억제되고 산업 내부의 자원 재배분도 억제됨(Ana Fontoura Gouveia외, 2018)

- 장기적으로 국가 전체 생산성과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는 구조가 고착됨
 - ▶ 퇴출되어야 할 기업이 시장에 남아있으면, 숙련 인력이 저생산성 부문에 묶여 효율적으로 재배치되지 못함
 - ▶ 그 결과, 대기업이 신사업 확장에 필요한 숙련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신산업 분야의 신규 고용 창출 속도도 느려짐
 - ▶ 이러한 인력 이동의 경직성은 대기업의 혁신 역량 약화로 이어지고, 결국 양질의 일자리 확대 가능성을 제한함

IV

대기업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

1. 한계기업 신속 퇴출의 필요

- 한계기업 문제는 2000년대 이후 저금리 기조와 정부·금융기관의 지원 정책 속에서 구조적으로 고착되어 왔으며, 특히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부실징후가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 ▶ 그 결과 자본·인력·기술 등 생산요소가 저생산성 부문에 묶여, 산업 전반의 혁신 속도를 저해하고 대기업 성장 기반까지 제약하는 부작용이 나타남
- 현재 구조조정 시스템은 부실 발생 이후의 사후 대응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조기 경보와 선제적 자원 재배분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함
 - ▶ 특히 회생·파산 절차의 장기화, 부실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의존, 채권단 협의 지연 등은 한계기업의 퇴출을 늦추고 경제 전반의 자원 배분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 ▶ 현행 구조조정 체계는 부실기업의 연명 방지와 산업 경쟁력 유지라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속도와 효율성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선제적 위험 관리보다는 사후 규제·통제에 치우쳐 있음.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생산성 성장을 저하와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위험이 큼
- 지속적인 지원 중심 정책 구조에서 벗어나,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 메커니즘을 강화해야 함. 한계기업이 자원을 소모하며 생존하는 상황은 구조조정의 실패로 이어지며, 부실기업 퇴출 지연이 전체 산업의 혁신을 저해함
 - ▶ 기업의 재무 상태, 세금 자료, 대출 정보 등을 한데 모아 신속하게 분석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부실 위험을 미리 찾아내야 함. 이렇게 발견한 정보는 금융기관·정부 등 관계 기관이 실시간으로 함께 공유해야 함

2.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구조 재편

- 대기업 일자리 비중이 OECD 최저 수준이며 과도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대기업 성장을 방해함
 - ▶ 중앙과 지방이 유사·중복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이를 통합해 지원체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 ▶ 창업·기술개발·수출지원 등의 사업을 통합 관리하고, KPI(핵심성과지표) 기반의 기준을 적용해 우수한 생산성과 혁신성을 갖춘 기업을 선별 지원하도록 정책을 구조적으로 재편해야 함
- ▶ 성과가 저조하고 구조개선 가능성이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유휴 예산은 대·중견기업과의 협력 R&D로 전환해 산업 역동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3. 노동 유연성 확보와 인재 이동 활성화 방안 마련

- 청년층의 대기업에 대한 일자리 선호도가 여전히 높음에도, 현 노동시장이 대기업 채용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임
- ▶ 따라서 고용 형태 간 규제 차이를 완화하고, 시간제·계약직·프로젝트 중심의 고용형태를 제도적으로 확대해야 함
- ▶ 퇴출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직무 재교육 등 인력 수요·공급 간 매칭을 지원하는 정책을 통해 대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게 해야 함

4. 한계기업 퇴출 및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

- 향후 구조조정 제도는 부실징후 조기 식별과 선제적 대응을 핵심 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 재무·세무·금융 정보를 통합 분석하는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채권단과 정책당국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협력 플랫폼을 마련해야 함
- ▶ 정책금융은 단순한 연명 지원이 아니라, 회생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구조조정 비용을 지원하거나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의 인수·합병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재설계해야 함
- ▶ 한계기업의 장기 존속이 초래하는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자원을 재배분하는 효율적 구조조정 시스템으로 전환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대기업 일자리 확대의 기반을 마련해야 할 시점임

참고 문헌

- 고영선(2024), 「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 KDI FOCUS, 130호.
- 김선영(2015), 「한계기업 구조조정의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중소기업금융연구.
- 김성태 외(2024), 「한계기업 현황과 생산성 분석」, 한국개발연구원(KDI).
- 대한상공회의소(2023), 「청년 구직자 일자리 인식조사」, 코참넷.
- 박찬우(2022), 「한계기업 현황과 시사점」, 산은조사월보.
- 배한형·전현배·신동한(2019), 「산업의 한계기업 비중이 기업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의 역할을 중심으로」, 『시장경제연구』, 제48권 제3호.
- 백훈, 홍성철, 엄부영, 김권식, 정은애(2024), 「중소기업 정책연계방안 연구」, 중소벤처기업연구원
- 서호준·임경국(2022),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의 핵심 이슈 및 개선과제 도출」, 『중소기업금융연구』, 제15권 제4호.
- 이석기 외(2023), 「신산업 투자 환경과 대기업 성장 전략」, 산업연구원.
- 이 태, 안준홍(2023), 「한국의 분절된 노동시장과 노동이동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주문석(2023), 「한계기업의 존속 현상에 대한 미시경제학적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법경제학연구.
- 중소벤처기업부(2024), 중소기업기본통계.
- 한국경제인연합회(2021), 「global insight 우리나라 고용시장 5대 특징」.
- 한국경제인연합회(2023), 「상장사 한계기업 비중 추이 분석 [보도자료]」.
- 통계청(2024), 「2023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보고서」.
- 통계청(2024), 「일자리행정통계」.
- Andrews, D., McGowan, M. A., & Millot, V. (2017), 「Confronting the Zombies: Policies for Productivity Revival」, OECD.
- Banerjee, R., et al.(2022), 「The Macroeconomic Impact of Zombie Firms」,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Gouveia, A. F., & Osterhold, C. (2018), 「Fear the Walking Dead: Zombie Firms, Spillovers and Exit Barriers」, OECD.